

여야, 윤석열 직무배제·공수처법 대치... 정국 '시계제로'

민주당 '尹 국정조사' 카드에 국민의힘 "秋 국조" 응수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선정 불발... 공수처법 개정 수순

추미에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으로 연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미에-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내년도 본예산 및 주요 법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 장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추 장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못 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인사권자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헌안 결의를 위해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약 14분 만에 회의를 선포해 무산됐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오후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날은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만 검토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꾸는 방안이 무기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총력 저지를 버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징계위, 빠르면 다음주 소집

추미에 장관 포함 7명...해임 의결시 대통령에 제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

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3명 포함되므로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 징계위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총장 직무배제 재고하라"

대검 연구관들 내부망에 성명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흐르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야,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공방

민주 "국정원 개혁 완성돼야"...국민의힘 "자해행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곧바로 민주당은 법제정의 당위론을 부각하며 맞섰다. 국회 정보위원회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 한데 모아 공통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동시에 국내사찰 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오히려 줄고, 공소시효 기간도 짧아지면서 국정원의 정치도구 우려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맞불 간담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며 "국정원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와 간사간 소(小)소위를 통해 논의하면서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100%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았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소위 단독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개입과 사찰할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제거했고, 대공 정보는 합치되 수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 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민주 코로나 피해 지원, 본예산 반영 검토

김태년 원내대표 "위기 가구 맞춤 지원...뉴딜 삭감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피해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

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그 재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나온 민주당의 입장은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것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중 2천여주 아파트 정원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으로 집 ㎡ 7천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 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담 포함) 덕산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행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유흥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금 받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제남일보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